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 , 현장에서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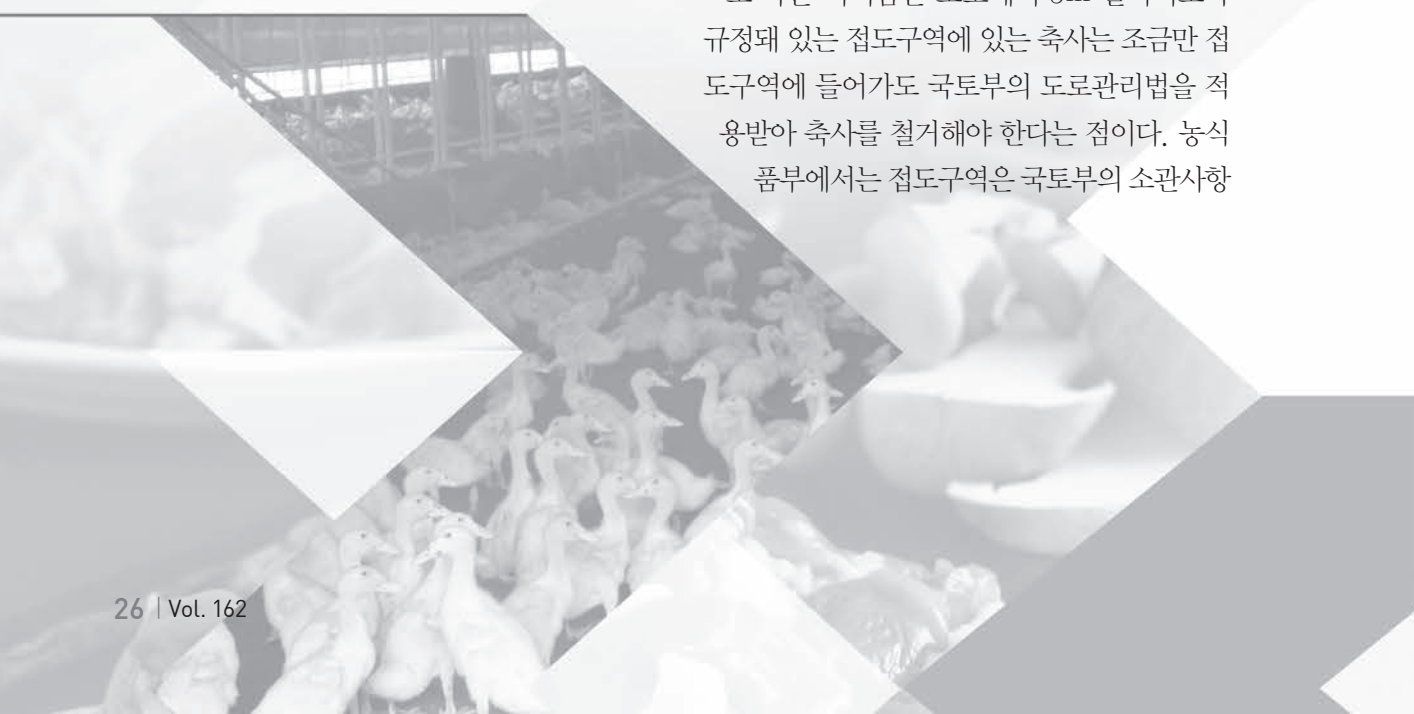
김유용 서울대 동물생명공학부 교수

국내 축산업 정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2018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적법화) 정책일 것이다. 사실 이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만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의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고 준비한 사항임에도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데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간과돼왔다.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조사한 후 정책이 제시돼야 함에도 일단 정책부터 제안하고 발생되는 문제들은 시행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이었다.

2018년 3월까지 전국의 모든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기로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단계별로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2024년 2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400㎡(121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들 중 전업농 또는 규모화 된 농가들은 대부분 축사면적이 600㎡(181평)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전국의 2만 384농가는 예정대로 2018년 3월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농장을 지나는 구거(용수로·배수로)의 처리 문제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에서 구거를 구입하려고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구거를 목장지 등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하는 데도 2~3개월이 걸린다. 또 승인이 난 사항을 다시 자산공사로 넘겨서 확인과 감정을 거치는 데에도 3개월 정도 추가기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어려움은 도로에서 5m 떨어지도록 규정돼 있는 접도구역에 있는 축사는 조금만 접도구역에 들어가도 국토부의 도로관리법을 적용받아 축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접도구역은 국토부의 소관사항



이므로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는 소수·약자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접도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과 비율 등을 고려해 향후에 도로를 실제로 넓힐 때 농가가 점유하고 있는 농장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도록 계약을 받는 것이 상생하는 방법일 것이다.

정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때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국토부나 환경부 소관 문제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는 것이 농식품부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국내 농산업이 축소되면 농식품부 부처의 위상도 낮아지고, 최악의 경우 다른 부처와 통폐합될 수 있다는 것을 유럽 여러 나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축사의 허가가 무척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축사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업무다.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축산농가 12만 6,000가구는 국내에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생산자들이므로 정부의 보호 대상이다. 특히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축산물의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국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공급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무허가축사의 양성화가 기존 축산농가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강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12만 축산농가들이 일반 국민들도 원하는 친환경축산농가로 거듭나기 위한 징검다리 정책이 되길 바란다.

●농민신문 [2016.11.09]

AI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종구 한국오리협회 담양군지부장

오리 사육농가로서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오던 중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연속이다. 농가로서는 방역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첫째로, 이번 AI는 철새들이 주범이다. 그런데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만으로 AI 차단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철새 탐방로를 폐쇄하기 전에는 탐방객들의 차량이나 신발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AI 중단 시 까지라도 탐방로를 폐쇄해야 한다.

둘째로, 2014년 1월 16일 이후 2년여에 걸쳐 오리산업은 반토막이 나 있다. 오리산업 종사자들은 생사기로에 서있는게 현실이다. 닭,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민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은 무책임하게 보도만 해서는 안된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어야 한다.

셋째로, 닭, 오리 질병검사 과정은 이렇다. 새끼오리 분양 전 축사 내·외부 시료를 채취해 AI 여부를 확인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사육을 시작한다. 25일령 쯤에는 폐사체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출하하기 2~3일전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최종적으로 도압장에 출하하고 도압장에서도 마지막 검사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금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또한 사람에게의 감염은 축산 종사자들에게 있어서의 일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AI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축산농가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닭, 오리를 소비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생의 길이 아닌가싶다.

●푸드투데이 [2016.12.01]